

한국인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 2004년 조사결과 분석

박 찬 옥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참여정부’를 기치로 내세운 노무현 행정부는 시민 정치참여의 마당을 활짝 열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각계각층의 국민이 고루 정치적 발언권을 확대하게 된 것은 아니다. 열린 참여의 장에서는 자원, 능력과 동기를 이미 갖춘 시민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시민 매 10명 중 5명 정도는 진정과 탄원을 위한 서명에 동참한 경험을 갖고 있다. 10명 중 2명 가량은 특정 상품을 사거나 사치 말자는 운동, 또는 정치적 및 사회적 목적을 위한 기부와 모금 활동에 참가했다. 참여 경험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할 의사를 물었을 때 전체시민의 절반 이상이 진정서 서명, 구매 및 불매, 기부 활동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반면 시위 참가, 정치집회 참가, 공직자 접촉, 인터넷토론 참가, 언론기관 접촉을 경험한 시민은 상대적으로 적어 매 10명 중 2명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차후의 의사를 고려할 때도 이런 행위를 수용하는 시민은 전체의 절반에 미달한다. 언론기관에서 토론이 활성화되고 정보화가 확산되어 있지만 대중매체를 통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인터넷토론에 나선 시민은 매 10명 중 1명을 찾기가 쉽지 않다.

개인의 교육과 가구소득 수준이 말해주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정치참여가 활발하다. 젊은 시민일수록 시위와 집회 참가는 물론 공직자와 언론기관을 접촉하는 행위도 능동적이다. 정치에 대한 관심, 지식, 정보가 많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민일수록 정치참여가 활발하다. 진보적인 이념성향을 가진 시민일수록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데 이는 특히 정치집회와 시위 참가에 있어서 두드러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4년도 기초학문육성지원과제(KRF-2004-BM0023)로 수행한 “제2차 한국종합사회조사와 시범적 연구: 시민권과 정치참여, 사회연결망과 사회적 지원, 일자리와 계층의식”의 연구결과 중 하나로서 작성된 것임.

지는 경향이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태도 역시 정치참여의 수준과 관련이 있다. 민주노동당 지지와 열린우리당 지지는 정치참여의 촉진 요인이지만 한나라당 지지는 정치참여를 억제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경향은 집회와 시위 참가, 진정서 서명, 구매 및 불매 운동에 가담하는 데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각종 단체와 조직에 가입하여 열성적으로 활동할수록 정치참여에서도 활발하다. 스포츠와 레저 동호회를 포함한 문화단체, 동창모임, 친목단체, 노조 등 직업조합, 시민운동단체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당보다 오히려 효과적으로 소속 구성원을 정치참여로 유도한다. 시민 속에 뿌리내리지 못한 정당의 현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시민이 조직 활동 역시 더 활발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치참여를 위해 자원이나 능력 및 기회가 주어진 시민이 다양한 단체 활동에 적극적이기에 정치참여에 유리한 점이 강화된다.

현 참여정부 시기에 사회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거나, 젊으며 진보적인 성향이 농후하거나, 단체 활동에 적극적인 시민이 정치 무대에서 보다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참여인가 하는 불멘소리가 흘러나올 소지가 있다. 정치참여에 있어서 불균등과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I. 서 론

본 연구는 한국의 노무현 정부 시점에서 시민에 의한 정치참여가 보여주는 주요 특징과 시민 정치참여 수준의 결정요인을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현재 한국인의 정치참여 행위는 어떤 형태(form) 또는 양식(mode)으로,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오늘날 한국에서 시민 개인에 의한 정치참여 행위의 수준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 논문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함으로써 구미(歐美) 국가를 비롯한 외국의 시민 정치참여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제시되고 검증된 개념과 분석모형의 일반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부각되고 있는 시민 정치참여의 본질적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오늘날 민주주의 이념과 정치가 규범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에 별 이의가 없듯이 민주주의의 정수(精髓)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의 정치참여가 갖는 중요성도 널리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다(Schlozman 2002: 436-438). 시민은 정치참여를 통해서

정치엘리트와 정부를 상대로 실현해주시기를 바라는 자신의 선호를 표명하고 압력을 행사하게 된다(Verba and Nie 1972: 3-5). 시민은 정치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정치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구현하기 어렵고 민주주의는 허울에 그치게 된다. 시민의 정치참여는 개인이익의 실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도 옹호된다. 특히 자발적 참여는 사회적 신뢰와 협력을 조장하고 공동의 이익을 발견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이다(이를테면, Putnam 2000). 시민 정치참여가 개인 이익의 실현이나 공동체 발전을 위한 도구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을 넘어서 그것이 개인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이는 밀(John S. Mill), 루소(J.J. Rousseau) 등의 주장을 토대로 정치참여와 민주주의를 규범적 시각에서 논의하는 이론가들의 관점에서 확인된다(예를 들어 Pateman 1970). 이런 여러 입장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시민 정치참여의 신장은 민주정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선진 국가는 물론 민주정치를 지향하는 많은 발전도상의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대두되었다(Huntington and Nelson 1976: 1).

시민 정치참여에 대한 규범적 논의와는 별도로 경험적 연구가 밀브래스(Milbrath 1965) 이래 주로 미국정치를 배경으로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왔다. 특히 버바와 나이(Verba and Nie 1972)의 연구는 이후 수행된 많은 경험적 분석의 그루터기가 되었다. 그리고 버바, 나이와 김재은(Verba, Nie, and Kim 1978)이 미국, 오스트리아, 인도, 일본,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유고슬라비아를 포함한 7개국 시민의 정치참여에 대하여 공동 수행한 비교연구가 중요한 업적으로 손꼽히고 있다. 한편, 반즈와 카아제(Barnes and Kaase et al. 1979) 등은 미국과 4개 서유럽 국가를 배경으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존 연구가 다룬 통상적(conventional) 정치참여 이외에 비통상적인(unconventional) 정치참여에도 초점을 맞추어 정치참여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경험적 연구의 전통을 토대로 기존의 개념과 분석모형을 한국에 적용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김종립 등(1980)이 선구적으로 1970년대 초 일반인의 정치참여 행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이후, 박동서·김광웅(1987), 신도철 외(1990)의 연구가 1980년대 일반인 정치참여에 대한 조사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민주화 시기에 와서는 박찬욱(1995), 어수영·곽진영(2001)의 연구가 1990년대 중반에 있어서 시민에 의한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에 대하여 논구했으며 이 분야에서 가장 최

근의 연구로 김형준(2004)의 분석이 발견된다. 그런데 한국 시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는 아직 다양한 형태 또는 양식의 행위를 망라하여 포괄적으로 분석한 것이 거의 없다. 더구나 시민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된 민주화 시기에 이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정부의 명칭부터 ‘참여정부’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일반시민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그것의 규범적 의의에 대한 논란은 분분했지만 막상 그 실태와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혀내거나 이를 토대로 시민 정치참여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는 불충분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가 2004년에 실시한 제2차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을 고찰하게 된다.

II. 분석모형: 주요 개념과 가설

1. 정치참여 개념의 범위

정치참여는 “시민이 정치엘리트의 충원이나 공공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하는 행위”라고 정의(定義)를 내린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정치참여의 정의에 관해서는 Bennett and Bennett 1986, 160-162). 하지만, 연구자의 이론적 또는 실제적 관심이나 연구의 여건에 따라 어떤 형태의 정치참여 행위를 정치참여 개념에 포함시키는가는 달라지게 된다. 이를테면 친구와 이웃 등 주위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정치쟁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나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정치에 대한 정보를 얻는 행위는 연구자에 따라 정치참여의 개념에 포함되거나 제외된다. 버바와 나이 등(Verba and Nie 1972; Verba, Nie, and Kim 1978)은 이런 행위를 정치참여의 경계선에 가까이 있는 준(quasi-)참여행위라고 하면서 정치참여 행위 그 자체로는 보지 않았다. 그들은 정치문제에 대한 일상적인 대화와 토론이 주위 사람으로 하여금 정부를 상대로 행동하도록 설득하려는 의도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참여로까지는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대중매체를 통한 정치적 정보와 지식의 획득을 정치참여 행위 그 자체가 아니고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심리적 정향의 표현으로 보았다. 본 연구도 이런 관점에서 일상적으로

주위의 가까운 사람과 정치에 대하여 토론하거나 대중매체를 통해 정치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은 정치참여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밀브래스 연구나 버바와 나이의 연구 이전에 시민 정치참여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투표참여에 집중되어 왔고 관찰 범위를 얼마간 넓은 경우에도 정당과 후보자를 위한 투표권유와 선거운동, 선거유세 참석, 선거자금을 위한 기부 등의 형태를 포함하는 선거적 참여에 국한되었다. 그런데 버바와 나이의 경우를 보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 공식엘리트 접촉과 같은 형태의 비선거적 참여행위까지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바와 나이(Verba and Nie 1972, 2-3), 버바·나이와 김재은(Verba, Nie, and Kim 1978: 1)의 정치참여 개념 역시 대체로 협소한 편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민주정치 체제에서 시민의 자발적이고 통상적인 참여행위만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자발적 참여는 행위자 자신이 의도하고 수행하는 행위를, 비자발적 또는 동원된 참여는 행위자가 아닌 타자의 기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를 가르킨다. 자발적 참여와 동원된 참여는 원칙적으로 구분되지만 실제에 있어서 언제나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강제, 노골적인 회유, 억압적인 설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동원된 참여가 확산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유형의 정치체제에서나 자발적인 참여와 비자발적인 참여는 혼재되어 있고 서로 동태적인 관계에 있다. 민주체제에서도 압력과 조종에 의한 참여가 전혀 없지 않고 지지유도를 위한 세련된 방식의 동원이 드물지 않다. 어떤 체제에서나 당초에 동원된 참여자가 내면화를 통한 자발적 참여자로 변하거나, 반대로 자발적 참여자가 동원된 참여자로 변질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동원의 의미를 명시적인 강제나 회유에 국한하지 않는 한 자발적 참여와 동원된 참여의 구분을 철저히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Huntington and Nelson 1976, 6-10). 이런 점에 비추어 정치참여를 “정부와 정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지를 보내기 위한 시민의 행위”로 규정하는 밀브래스와 조엘의 정의(Milbrath and Goel 1977, 2)가 버바와 나이의 정의보다는 그 범위가 다소 넓다. 정치엘리트나 정부를 상대로 의례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비자발적 행위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밀브래스와 조엘의 연구도 역시 민주국가에서 체제내적 또는 합법적인 형태의 참여, 즉 통상적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버바와 나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다.

선진 민주국가에서조차 비교적 최근까지 통상적인 정치참여만이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시민이 행하는 바람직한 참여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비통상적인 정치 참여는 주로 정치적 항의를 가르키는데 정당이나 이익집단 등 기존의 대표 기제(機制, mechanism)를 통해서 여과되지 않은 정치 행위였기 때문에 정치병리학의 시각에서 파악되었다. 정치적 항의는 실정법에 위배되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을 수반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통상적 정치참여에는 서명운동이나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서 정부에 항의하거나 입장을 공표하는 합법적 형태의 행위도 주요한 일부로 포함된다. 그리고 실정법의 제약을 넘어서는 참여행위라 할지라도 비폭력적인 불복종은 많은 시민들에 의하여 정당하다고 수용될 수 있다. 따라서 비통상적 정치참여가 정치적 항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도 이를 온통 비합법적이거나 폭력적인 참여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체제내에서도 비통상적 정치참여는 통상적 참여를 보완하여 정치엘리트와 정부를 상대로 한 요구의 투입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비통상적 정치참여는 시민의 정치참여를 규제하는 기존 법률과 관습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큰 항의성 정치참여이다. 이러한 비통상적 정치참여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서 선구적인 업적은 앞서 언급된 바대로 반즈와 카야제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들의 연구는 진정서 서명, 시위, 불매, 공과금납부 거부, 파업, 태업, 교통 방해, 공공건물 점거 등 항의성이 농후한 형태의 참여행위를 포함하였다(Kaase and Marsh 1979, 38-41; Marsh 1990, 1-4). 민주국가에서도 비통상적 정치참여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 정치참여 개념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행위 중에도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인 행위가 빈번히 전개될수록 통상적 정치참여와 비통상적 정치참여의 명확한 구분이 항상 가능하지 않게 된다. 요컨대, 정치참여 개념을 당초부터 통상적 참여에만 국한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실제와 부합하지 않다.

헌팅턴의 정치참여 개념은 그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다. 그는 정치참여를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민의 행위”로 정의하였다. 그에 의하면 정치참여 행위의 형태는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이며, 조직되거나 자연발생적이며, 지속적이거나 간헐적이며, 평화적 또는 폭력적이고, 합법적인 것이 있고 비합법적인 것도 있으며, 효과가 있거나 없을 수도 있다”(Huntington and Nelson 1976, 3-10). 이 정의에 의하면 시민 정치참여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자행되는 고도로 폭력적인 테러리스트 행위, 국제적으로도 흉악한 범죄로 지탄받는 항공기 납치도 포함될 것이다. 이

러한 최광의 정의는 아마도 현실적이다. 하지만 광범한 형태의 정치참여 행위에 관하여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지나치게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포함하려는 시도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확산되어 있는 형태의 행위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으면 연구의 초점이 흐려질 우려도 있다.

본 논문에서의 정치참여 개념의 범위는 버바와 나이의 그것보다는 넓고 헌팅턴의 경우보다는 좁아 대체로 반즈와 카제의 개념 범위에 근접한다. 즉 통상적 참여는 물론 비통상적 참여를 포함하되 불법이나 폭력성이 농후한 형태의 행위는 제외시키는 개념화와 측정방식을 채택하고자 한다. 정치참여 개념의 범위를 비통상적 참여까지 포함하여 어느 정도 넓게 규정하는 것은 후속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기도 하다.

2. 연구가설

여기서는 시민이 왜 정치에 참여하는가 그리고 시민 개인 간 정치참여 수준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인가를 설명함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가 제시하는 바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러한 설명에서 종속변수는 두말할 것 없이 정치참여 행위이다. 이 종속변수의 변량을 설명하는 독립변수군(群)을 몇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그림 1에서와 같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의 경로로 보아 종속변수와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있는(distal) 기본 독립변수군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들 수 있다. 둘째와 셋째 변수군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비하여 종속변수에 상대적으로 보다 근접한(proximal) 독립변수들이다. 이 논문에서는 둘째 독립변수군으로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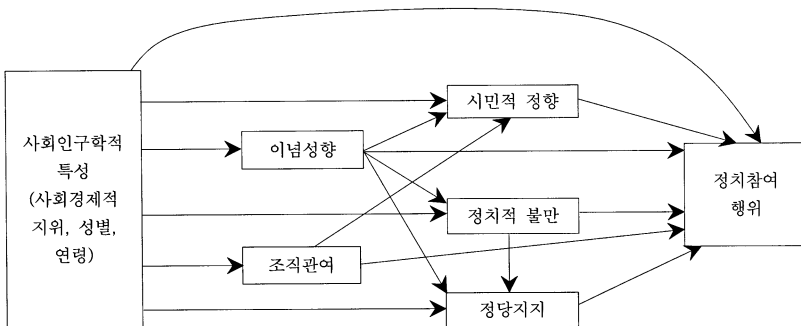


그림 1. 시민 정치참여의 분석모형

심리적 태도를, 그리고 셋째 독립변수군으로 행위자 개인이 관여되는 조직적 맥락(organizational context)을 고려한다.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정치참여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운데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것은 사회경제적 지위(SES, socioeconomic status)이다. 이는 교육, 소득, 직업 가운데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복합지수를 가리킨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정치참여에 필요한 지식, 시간, 자금 등의 자원과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이들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준다. 시민 개인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블루칼라 보다는 전문관리직을 비롯한 화이트칼라 직업일수록, 곧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치참여의 수준이 높다고 하는 명제는 다양한 국가의 맥락에서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타당한 것으로 수차례 검증되었다. 특히 교육수준이 정치참여 수준에 미치는 정(正)의 효과는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버바와 나이(Verba and Nie 1972, 125-137), 밀브래스와 조엘(Milbrath and Goel 1977, 92)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시민일수록 통상적 정치참여가 활발하다는 것을 밝혔다. 버바와 나이는 개인의 교육, 소득, 직업을 포함한 복합지수로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고 이것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여 사회경제적 지위 모형(SES model)을 주창하였고 이것은 이후의 분석에서 표준적 내지 기준선(baseline) 모형이 되어 지속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되었다(Schlozman 2002, 442-443). 이어서 버바, 나이와 김재은도 미국을 포함한 7개국에서 이 모형의 일반적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교육과 소득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사회경제적 자원 수준(SERL, socioeconomic resource level)을 측정하여 이것을 사회경제적 지위로 같음했다(Verba, Nie, and Kim 1978, 63-64, 80-93, 112-142). 한편 반즈와 카제 등 연구팀은 비통상적 참여의 경우에도 사회경제적 지위 모형이 타당하다는 점을 구미 5개국 연구에서 보여주었다(Marsh and Kaase 1979, 112-117, 120-128; Marsh 1990, 33-55).

사회경제적 지위 모형은 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치참여 수준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그림 1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 정치참여 행위의 경로)만을 지적하지 않고 이 독립변수가 시민적 정향(civic orientations) 또는 심리적 관여(psychological involvement)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정치참여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이를테면, 사회

경제적 지위 → 시민적 정향 → 정치참여 행위의 경로)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시민적 정향은 시민이 정치에 대하여 갖는 관심, 지식, 정보 등은 정치적 인지와 정치효능감을 주로 의미한다.

민주화 시기의 한국인 정치참여 수준의 결정요인으로서도 사회경제적 지위 가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박찬욱(1995)은 1990년대 중반에 시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신과 수입이 높은 유형의 직업에 종사할수록 통상적 정치참여에서 활발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리고 교육수준에서는 고학력층, 소득수준에서는 중산층, 직업유형에서는 대학생집단이 비통상적 정치참여 행위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점도 밝혀내었다 또한 노무현 정부 시기에 있어서 정치참여를 연구한 김형준(2004)에 의하면 선거운동 가담과 같은 통상적 또는 전통적 참여에서는 고졸의 교육 수준에서 참여가 가장 활발하였고, 소득은 낮을수록, 전문직과 대학생보다는 자영업이나 농림어업 종사자가 더 높은 참여수준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여중생 사망을 추모하는 촛불시위와 같은 대중집회, 낙천·낙선운동 등 시민단체 활동, 인터넷 토론을 비롯하여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부터 활성화된 형태의 정치참여에서는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화이트칼라 직업종사자나 대학생이 다른 유형의 직업종사자보다 정치참여의 경험이 많았다.

비통상적 참여행위를 포함해서 분석하는 본 논문에서는 앞서와 같은 국내외 기존 관련문헌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시민일수록 더욱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한다.

성별에 따라 정치참여 수준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도 연구의 관심사이었다.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는 좀더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여러 국가를 배경으로 알려져 있다(Verba and Nie 1972, 236-251). 그런데 정치참여 수준에서 나타나는 성차가 무엇에 기인하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여성이 남성보다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 관심을 가진 여성에게조차 참여의 기회구조가 남성에 비하여 폐쇄적이고 공식적 규칙은 물론 사회규범이 참여를 제약하는 외부적 요인이라는 주장이 있고, 외부적 제약이 여성 스스로에 내면화되어 참여에 소극적이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위의 책 254-266 참조). 이런 점에 비추어 성별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할 때에는 주요 매개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많은 경험적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매개변수

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특성이 참여수준에 미치는 부(負)의 효과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최근에 이루어진 경험적 분석에서도 일반적으로 남성의 정치참여 수준이 여성의 그것보다 높다. 다만, 최근에 올수록 이러한 성차는 좁혀졌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어수영·곽진영(2001)에 의하면 투표, 선거유세 등 통상적 정치참여에서 뿐만 아니라 비통상적 정치참여, 즉 정치적 항의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활발하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과 비교하여 1990년대 중반에 그러한 남녀 차이가 축소되었다.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II: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정치참여가 덜 활발하다.

버바와 나이의 연구를 포함해서 미국인의 정치참여에 관한 분석들은 투표참여를 비롯한 통상적 참여에 있어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참여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Verba and Nie 1972, 138-148; Milbrath and Goel 1977). 10대말에서 20대의 젊은 사람은 이동성이 두드러져 지역사회에 정착해 생활할 기간이 짧고 주택이나 재산의 소유 및 다른 이해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자원이나 심리적 동기에 비추어 정치참여의 수준이 가장 낮다. 나이가 들수록 정치참여가 점차 활발하게 되지만 노년에 들게 되면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 신체적 허약, 은퇴 심리로 인하여 정치참여 수준이 다소 낮아진다. 이것이 이른바 생애주기 효과(life-cycle effect)인데, 비교적 가파르고 정(正)의 부호를 가진 직선보다는 일정 시점까지 그러한 모양을 나타내다가 그 다음에는 기울기의 방향이 바뀌어 종속변수의 값이 감소하는 곡선으로 표현된다. 버바와 나이의 연구에서는 투표율은 50대에서 정점에 이르고 60대 이후 낮아지는데, 다른 형태의 행위를 포함하는 통상적인 정치참여에서는 전반적으로 40대에 가장 활발하게 된 이후 50대부터 서서히 수준이 하락한다. 그런데 버바와 나이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를 통제하는 경우, 노년기에 나타나는 정치참여 수준의 감소는 완만하게 되어 연령과 통상적 정치참여 수준의 관계를 직선적인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을 시사했다.

그런데 비통상적 정치참여의 연구에서 연령과 참여수준의 관계는 이와 판이하다. 반즈, 카야제 등이 중심이 된 연구팀은 정치적 항의의 잠재력은 혈기가 왕성하고 신체적 기동력을 갖는 20대 초반에 가장 강하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약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Marsh 1990, 35-42; Marsh and Kaase 1979, 99-112; Muller 1979). 이 경우에 생애주기 효과는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정치참여가 활력을 잃어

가는 직선으로 표시될 수 있다. 그렇지만 비정상적 정치참여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령과 참여수준이 보여주는 역(逆)의 관계는 생애주기 효과 이외에 세대 효과(generational effect)로도 설명된다. 즉 잉글하트에 의하면, 부모들과 다른 물질적, 사회적 환경조건에서 공통된 역사적 경험을 겪으며 형성기를 보낸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상이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내면화하게 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참여행위를 수용하고 실행한다(Inglehart 1979, 344-347). 이렇게 보면, 연령 변수가 가치관을 매개로 하여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에 이것을 세대효과의 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시민의 정치참여에 관한 경험적 연구도 정치참여의 통상적, 비정상적 성격에 따라 연령과 참여수준의 관계가 상이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선거운동 참가의 경험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편이다(김형준 2004). 한편, 젊은 연령층에서일수록 비정상적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수용된다(박찬욱 1995). 연령이 적을수록 대중 집회나 인터넷 토론에 참여한 경험이 많고 시민단체 운동에 참여할 의향이 강하다(김형준 2004). 결국, 참여행위의 형태에 따라 연령과 참여수준이 달라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III-1: 투표와 같은 순전히 통상적인 정치참여에서는 대체로 연령이 많은 시민일수록 참여수준이 높다.

가설 III-2: 비정상적 성격이 농후하거나 완전히 비정상적인 정치참여에서는 젊은 시민일수록 참여수준이 높다.

이 논문을 위한 조사자료는 연령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생애주기 효과와 세대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비교하도록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생애주기 효과와 세대 효과를 언급할 여지는 있다. 후술 하듯이 통계분석에서 응답자의 연령은 10년 단위로 구분된 범주의 값으로 표시된다. 연령이 정치참여 행위로 직접 연결되는 경로는 생애주기효과와 연관성이 깊고, 이념성향이나 정치적 불만 및 당파적 태도를 매개로 하여 연결되는 경로는 세대 효과의 작용을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하게 된 16대 대선에서의 후보자 지지는 세대 요인을 배제하고 설명할 수 없다. 20대와 30대 유권자는 압도적으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였고 40대 이상, 좀 더 명료하게는 40대 후반 이후의 유권자는 이회창 후보 쪽으로 지지가 경도되었다(안부근 2003, 100). 최근에 올수록 한국의 정치와 사회의 변동

과 관련하여 세대요인에 대한 고찰은 더 많은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송호근 2003). 연령범주를 10년 단위로 구성하는 경우, 정확하지는 않아도 세대요인이 정치참여에 주는 영향을 다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0대는 탈냉전과 민주정치 시기에 형성기를 경과하고 있는데, 개인주의적 사고와 행동의 성향이 아주 농후하다. 30대 역시 전반은 탈냉전 민주체제 아래에서 정치의식을 형성하였고 후반의 경우 민주화 운동이 활성화된 시기에 민주주의 가치를 체현하였다. 40대 대부분은 유신체제나 그 이후 권위주의 체제가 심화된 시기에 성장하면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간직하였고 50대는 경제제일주의나 반공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60대 이상은 전쟁과 궁핍의 상황을 겪으며 자라나고 형성기를 보냈다(조중빈 2003). 이런 점에 비추어 젊은 세대일수록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변화에 대하여 더욱 수용적이며 정치적 항의에 익숙하다. 나이가 든 세대일수록 정치적으로 위축된 분위기에서 사회화되었기에 비통상적 참여 행위에 대한 유보적 자세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러한 세대 효과는 시민 정치참여의 분석모형에서 연령이 이념성향, 정치적 불만, 정당지지와 같은 당파적 태도를 거쳐 정치참여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서 감지된다.

2) 정치심리적 태도와 정치참여

시민이 심리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정치참여 행위를 설명하는 또 다른 일군의 독립변수를 구성한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 및 지식, 정치 뉴스를 전달하는 미디어에 대한 주의(注意), 정치효능감(sense of political efficacy, sense of civic competence), 정치적 신념과 가치관, 좌-우 또는 진보-보수 이념성향, 정치적 불만, 정치 불신, 정당 선호 및 지지와 같은 당파적 태도가 여기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서와 제시된 바대로 시민적 정향(civic orientations), 이념성향(ideological disposition), 정치적 불만과 정당지지의 네 가지 정치심리적 변수를 고려하기로 한다.

시민적 정향은 우선 정치적 관심, 정치적 정보와 지식의 획득과 보유를 포함하는 인지(cognition) 차원의 정향을 가리킨다. 기존 연구에서는 특히 선거를 무대로 하는 참여행위를 중심으로 규정되는 통상적 참여에 있어서 정치에 대한 관심, 지식 또는 정보가 많을수록 활발하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다(Schlozman 2002, 439).

정치적 인지 이외에 정치효능감이 시민적 정향의 한 구성요소로서 아마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을 것이다. 이 개념은 투표행태 연구에 공헌이 많은 미시간대학 연구진에 의하여 개발되었는데(Campbell et al. 1954), 시민 개인이 정치적 행위로서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느끼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시민적 의무가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감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효능감은 개인이 정치과정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내면적인 것과 영향력을 미치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느끼는 외부지향적인 것으로 다시 구분된다. 기존 연구는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통상적 내지 비통상적 정치참여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일치된 결과를 산출하였다(Benett and Bennett 1986, 194-195; Verba and Nie 1972; Milbrath and Goel 1977; Verba, Nie and Kim 1978; Barnes and Kaase et al. 1979). 앞서 언급된 사회경제적 지위 모형에서 시민적 정향의 매개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후술되는 바와 같이 개인이 각종 단체와 조직에 관여되어 정치참여 행위에 연결되는 데에 있어서도 시민적 정향의 매개적 역할은 중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논의를 토대로 정치적 인지와 정치효능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시민적 정향을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IV: 시민적 정향의 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정치참여 수준도 높다.

어떤 정치적 행위든 이를 설명하는 근본적인 심리적 요인으로서 가치관과 신념체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잉글하트는 신체적 안전과 경제적 번영을 중시하는 물질주의와 사회적 평등, 개성, 환경보존, 삶의 질 등 비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탈물질주의의 구분을 토대로 시민의 정치참여 행위는 물론 정치변동을 고찰하였다(Inglehart 1977; 1990). 탈물질주의 가치관을 갖는 사람은 물질주의자에 비하여 시위를 포함한 비통상적 참여행위를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세대효과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되었다. 가치관 및 신념체계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세대효과와 부분적으로 중첩되지만 독립적으로도 검토할 만하다. 이 논문에서는 자료 여건상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가치와 정치참여의 관계를 다루지 않지만, 현재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잉글하트의 가치관 개념에 못지 않게 중요한 진보-보수 이념성향의 영향을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이념성향을 진보-보수의 연속선상 어디에 위치시키는가하는 주관적 이념성향에 초점을 맞춘다. 주관적 이념성향은 변화여부에 대

한 수용성, 더 나아가서는 변화의 속도에 대한 선호를 의미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태도이다. 자신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현상을 타파하는 변화를 원할 것이고, 반대로 자신을 보수라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현상유지적 성향을 갖고 있을 것이다. 개인의 이념성향은 다른 정치심리적 태도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념성향은 개인에 따라서는 신념체계 수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며, 적어도 해당되는 개인이 정치를 바라보는 기저의 관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이념성향은 그림 1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그것 자체로서 정치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으나, 정치적 불만이나 당파적 태도 및 시민적 정향과 같은 좀더 구체적인 정치심리적 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참여에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유럽 국가의 경우 좌-우 척도에 비추어 자신을 좌에 위치한다고 규정할수록 통상적 참여가 좀더 활발하고, 정치적 항의에 대한 수용태도에서는 훨씬 더 적극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이를테면 Marsh 1990, 65-66, 82). 16대 대선으로 노무현 정부가 출현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 전개된 정치에서 진보-보수 이념성향의 중요성은 간과되기 어렵다. 실제로, 김형준의 연구(2004)에 의하면 비통상적 성격이 농후한 정치참여 행위의 수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념성향의 의의가 부각된다. 노무현 정부 초기의 시점에서 이념성향은 통상적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보이지 않았고, 다만 정치적 관심을 거쳐 정치참여의 수준을 높였다. 그런데 비통상적인 정치참여 있어서는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정치효능감이 더욱 높고 결국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이념성향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크지 않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무현 정부에서 정치참여의 장은 진보적인 사회·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가설 V: 시민의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정치참여 수준이 높다. 비통상적 성격이 농후하거나 완전히 비통상적인 정치참여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당파적 태도와 정치참여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도 발견된다. 구미 국가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이 광범하게 확산되어 있다. 이는 개인이 특정 정당에 대하여 갖는 호의적 태도인데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내면화된 것이다. 정당일체감과 선거적 참여의 관계는 많은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당일체감이 강할수록 해당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등의 참여행위가 활발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떤 정당과 자신을 동일시하는가하는 정당일체감의 방향과 통상적 정치참여 수준의 관계도 분석된 바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공화당과의 강한 일체감을 갖고 있는 개인(strong Republican identifier)은 민주당의 경우보다 더욱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화당과 일체감을 갖거나 지지하는 사람이 민주당에 대하여 그러한 사람보다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를 통제한 다음에도 이러한 경향이 없어지지 않는다(Verba and Nie 1972, 209-228).

한국의 경우 당파적 태도와 정치참여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경험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사실, 정당의 수명이 길지 않고 당명을 자주 바꾸고 정당간 이합집산이 빈번한 상황에서 유권자 개인이 구미에서와 같이 정당일체감을 형성시킬 수가 없다. 단지, 단기적으로 변화가 무쌍한 정당 지지 내지 선호는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국가에서의 연구에 준거하면, 어떤 정당이든 정당에 대한 지지나 선호의 태도를 갖고 있는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통상적, 비통상적 정치참여의 수준이 다소나마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된다. 아울러, 현 17대 국회 시기에 주요 3당이라고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을 놓고 볼 때에 시민 개인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것과 그의 정치참여 수준을 연관시키는 추측이 가능할 것이다. 즉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가 투표참여를 포함한 통상적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지만 비통상적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효과를 미친다고 판단된다. 민주노동당은 노조를 중요한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노조에 가입되어 있거나 노동운동을 수용하는 태도가 있는 개인은 비통상적 정치참여에 있어서 경험이 있거나 그러한 정치참여 행위를 펼칠 의사가 농후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를 표방하면서 평화적 시위,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를 통한 쟁점토론, 인터넷을 통한 의견표명에 개방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것에 비추어,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지지자는 반대당인 한나라당 지지자보다 이런 형태의 참여행위에 있어서 경험이 더 많고 의사도 더욱 강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제시하게 된다.

가설 VI-1: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시민은 그렇지 않은 시민보다 더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한다.

가설 VI-2: 민주노동당이나 열린우리당 지지자는 한나라당 지지자보다 비통상적 성격

이 능후하거나 원만한 정치참여에 있어서 더 활발하다.

정치적 불만(political dissatisfaction)도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는 정치심리적 태도의 하나이다. 정치적 불만은 여러 각도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 범위에 비추어 광범위(diffuse)한 것인가, 아니면 특정적(specific)인가를 따질 수 있으며, 그 대상과 관련하여 정치상황 일반과 정치체제, 정치와 정부 제도(기관), 집권자나 공직 담당자 개인 또는 집단, 정책 등을 말할 수 있다. 정치적 불만의 외연을 확장할수록 정치 불신(political distrust), 정치적 냉소(political cynicism), 소외(alienation) 등 여러 유사한 태도와와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 논문에서는 정치적 불만을 다각도로 다루는 대신 정치일반에 대한 불만의 정도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 연구를 검토하면 정치적 불만과 통상적 정치참여의 관계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정치적 저항을 중심으로 하는 비통상적 정치참여에 있어서 정치적 불만은 참여행위를 실행할 의사로 직결된다. 이 점은 반즈와 카아제를 중심한 연구진에 의하여 검증된 바 있다(Farah, Barnes, and Heunks 1979, 433-439).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제기한다.

가설 VI: 정치적 불만의 정도가 강한 시민일수록 비통상적 정치참여의 수준이 더 높다.

3) 조직적 맥락과 정치참여

개인은 고립되어 생활하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인들과 사귀고 일하며 어울리는 사회관계의 맥락에서 정치참여 행위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행태를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심리적 태도에 의해서만 설명할 수가 없다. 정치행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해당 개인의 가족, 친구, 이웃, 동료, 정치인, 정당, 자발적 결사체, 지역공동체를 포괄하는 맥락을 파악하면 좀더 잘 설명된다. 이를테면, 어떤 개인이 동네와 교회에서 자주 어울리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특정한 방식의 정치행태를 보여줄 수 있다(Huckfeldt, Plutzer, and Sprague 1993; Huckfeldt 1979).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자신의 이웃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그런 선택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Johnson, Shively and Stein 2002). 사회적 맥락 가운데 개인이 소속되고 그것의 내부에서 또는 그것을 활용하여 외향적으로 활동을 벌이는 조직이나 단체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조직관여(組織關與, organizational involvement)는 개인이 어떤 단체와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조직관여를 정치참여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연구

자도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조직관여는 정치참여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참여를 촉발하는 조건이다.

정치참여와 밀접하게 관련된 조직으로서 정당을 손쉽게 생각하게 된다. 정당은 당초에 정치적 목적을 표방하고 특히 선거무대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고 동원한다(Huckfeldt and Sprague 1992). 그런데 정당은 개인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조직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며 비정치적 목적을 내세우는 조직보다 반드시 개인의 정치참여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발적인 정당가입이 드물고 정당조직이 일반시민들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정당소속 자체는 정당원으로서의 활동과 거리가 있다. 정당이 다른 사회조직과 분화된 수준이 낮고 정치제도로서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면 정당활동이 일반적인 사회생활과 기능적으로 차별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정당활동 전부를 그의 정치참여 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 한편, 정치영역 밖에 존재하는 듯한 문화단체, 종교단체, 기타 자원봉사단체가 오히려 그것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책적 입장을 실현하기 위해 정당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소속구성원의 정치참여를 권유하고 유도하는 정치적 자극을 제공할 수 있다(Verba and Nie 1972, 191-194; Schlozman 2002, 450-1). 설령 이런 비정치적 조직이 정치적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조직활동을 통해서 습득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의 기술이 정치영역에서 발휘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의 조직관여와 정치참여의 관계를 논할 때에는 정당 이외에, 시민운동단체, 노조나 사업자단체 등 직업조합, 종교단체, 문화단체(스포츠 단체, 동호인 모임 포함), 동창 모임, 향우회, 친목단체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과연 이들 가운데 어떤 종류의 단체가 구성원의 정치참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시민의 조직관여는 해당 개인의 정치참여 수준을 어떻게 향상시키는가? 기존의 연구문헌은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답을 제시한다(Brady, Verba, and Schlozman 1995; Verba and Nie 1972, 175; Verba, Nie, and Kim 1978, 81; Schlozman 2002, 450-451). 자발적으로 가입한 조직이나 단체라 하더라도 그 지도부나 간부는 일반 구성원들로 하여금 정치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거나 촉구한다. 일반 구성원은 조야하거나 세련된 동원의 대상이 된다. 조직의 구성원은 단지 동원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주체적으로 조직을 활용하여 정치에 참여하기도 한다. 조직은 그 구성원에게 비구성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참여의 기회와 통로를 제공할 수 있

다. 그 구성원은 마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치참여를 위한 자원이 되듯이 조직관여를 자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그림 1에서 조직관여로부터 정치참여 행위에 이르는 직접적 경로는 조직 구성원이 동원된 참여행위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주체적으로 조직을 자원으로 이용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관여는 소속된 일반구성원의 시민적 능력과 정향을 함양함으로써 정치참여의 수준을 제고한다. 조직 구성원 간에 정치문제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대화와 토론은 구성원의 정치적 관심, 정보, 지식 등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시민의 조직생활은 대인관계 기술, 의사소통과 설득 능력을 높이고 정치효능감의 강화로 이어진다. 퍼트남(Putnam 1993; 2000)을 비롯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가에 의하면 자발적 조직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은 구성원 사이에 협조와 신뢰의 연결망을 형성시켜 이 역시 구성원의 정치효능감을 향상시킨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조직관여가 시민적 정향의 수준을 높이게 되면 결국 정치참여의 수준도 높게 된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다음의 가설이 도출된다.

가설 VIII: 조직관여 수준이 높은 시민일수록 정치에 더 활발하게 참여한다.

사회경제적 지위 모형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치참여 수준에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효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조직관여 모형은 개인의 조직관여가 정치참여 수준에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효과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두 모형의 상호관계가 분석의 주안점으로 대두된다. 우선, 조직관여 모형에서의 독립변수적 효과는 사회경제적 지위 모형에서의 독립변수적 효과에 부가되어 사회경제적 지위 덕분에 이미 정치참여에 유리한 개인을 더욱 더 그러하도록 보강할 수 있다.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유하는 시민과 그렇지 못한 시민간에 정부 당국자나 정책에 대한 발언권의 차등은 두드러지고 정치적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반면, 정치참여 수준에 대한 조직관여의 효과가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를 억제 또는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Verba, Nie, and Kim 1978, 84-91). 현 노무현 정부는 시민의 정치참여를 고양하고자 언필칭 참여정부를 외치고 있다. 현 집권세력은 과거의 어느 경우보다도 정치적 평등에 대한 지향(志向)이 강하다. 이 시점에서 시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경험적 자료에 비추어 사회경제적 지위 모형과 조직관여 모형은 어떤 상호관계를 보이며 작동하는가하는 것이 의미있는 지적 관심사가 될 만하다.

III. 자료와 측정

이 연구에서는 2004년 여름 전국적으로 다단계지역집락표집에 의하여 추출된 성인 남녀 1,312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제2차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가 분석된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종속변수는 정치참여 행위이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8가지 행위 형태 각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주어졌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치적, 사회적 행동을 합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지난 1년 동안 혹은 그 이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행동을 하신 적이 없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실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전혀 없는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체적인 행위형태는 1) “진정서에 서명하기”(진정서 서명), 2) “정치적, 윤리적 또는 환경적 이유로 어떤 상품을 불매하거나 사주기”(상품 구매·불매), 3) “시위에 참가하기”(시위 참가), 4) “정치 모임이나 집회에 참가하기”(정치집회 참가), 5) “나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과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하기”(공직자 접촉), 6)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위해 기부하거나 모금하기”(기부 활동), 7) “나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언론기관에 접촉하거나 출연하기”(언론기관 접촉), 8) “인터넷의 정치공개토론이나 토론 모임에 참여하기”(인터넷토론 참가)이다. 이에 대한 응답항목은 “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 “전에는 안했지만 앞으로 할 수 있다” “전에도 안했고 앞으로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선택할 수 없다”로 제시되었는데, 분석에서는 참여행위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경험이 없고 앞으로도 할 의향이 없다 = 1, 경험은 없으나 앞으로 할 의향이 있다 = 2, 지난 1년 동안이나 그 이전에 경험이 있다 = 3으로 재부호화하여 서열 척도를 구성하였다.

여기서 종속변수는 정치참여 행위를 실제로 한 경험 여부뿐만 아니라 차후 그러한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의향(意向), 가능성 또는 잠재력(participatory behavioral inclination, proneness, or potential) 여부도 포함하고 있다. 경험과 달리 의향은 엄밀히 말해서 행위변수가 아니라 태도변수이지만 이것은 시민적 정향과 같이 순수한 심리적 태도변수가 아니라 구체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행위성향으로서 넓은 범위의 행위변수에 포괄될 수가 있다. 이미 구미 국가에서의 비통상적 정치참여를 다룬 반즈와 카아제 등의 연구(1979)에서도 비통상적

정치참여는 통상적 정치참여에 비하여 경험한 시민이 응답자가 될 확률이 낮아 실제의 행위 경험이 아니라 행위의 의향을 물어 정치참여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투표참가나 선거운동 가담과 같은 순전히 통상적인 성격의 선거적 참여행위는 위 질문에 직접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는 17대 총선이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실시되어 조사대상자가 이 선거에서 투표했는가를 묻는 질문도 작성되었다. 즉 “귀하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에게 투표 하셨습니까”(총선투표)하는 문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특정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를 지정한 응답은 투표참여(= 1)로, 어느 국회의원 후보에게도 투표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투표불참(= 0)으로 재부호화되었다. 그런데 총선투표 변수의 경우 명목척도 수준에 머물고 있고 행위의 경험에 관련될 뿐 추후 행위의 의향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연구자는 이를 앞서 언급된 다른 형태의 행위와 비교하기는 했지만 참여행위의 총체적 수준을 측정하는 복합지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버바, 나이와 김재온(1978)의 연구에서와 같이 교육과 소득 수준의 복합지수로 측정되었다. 교육수준은 중학이하,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의 범주로 구성되는 3점 척도이고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구총소득으로 측정되었는데 그 범주는 소득없음, 50만원 미만, 50~99만원 등에서 1,000만원 이상까지 이르는 22점 척도이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각각 표준화한 수치를 더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를 재는 점수로 활용하였다(최소 -2.99, 최대 4.88). 이 밖에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하여 관리전문직, 준전문사무직, 학생, 서비스판매직, 생산기능노무직, 주부, 무직 및 기타의 직업유형도 단순상관관계 분석에서 고려하였고, 가변수를 구성하여 실행한 분석에서는 무직 및 기타 범주가 준거로서 제외되었다. 성별은 남성 = 0, 여성 = 1의 명목수준 변수이고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의 6개 범주로 측정되었다.

정치심리적 태도 변수의 측정에 대하여 살펴보자. 정치효능감은 다음과 같은 4개의 진술 각각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이의 평균을 구하였다: 1) “나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떤 영향도 주기 어렵다”, 2) “정부는 나 같은 사람들의 의견에 관심이 없다”, 3) “나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 4)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정치나 행정에 대해 나보다 잘 알고 있다.” 정치적 인지 변수는 정치

정보/지식과 정치적 관심의 복합지수이다. 정치 정보/지식은 “귀하는 평소에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정치 뉴스를 어느 정도 자주 듣거나 보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하여 4점 척도(“전혀 안 함”, “1주일에 두 번 미만”, “1주일에 서너 번 정도”, “거의 매일”)로, 정치적 관심도 역시 4점 척도(“전혀 관심 없다”, “별로 관심 없다”, “다소 관심 있다”, “매우 관심 있다”)로 측정되었다. 두 척도를 합하여 2점에서 8점에 이르는 값을 갖는 정치적 인지 변수를 만들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시민적 정향은 정치효능감과 정치적 인지 각각의 표준화 수치를 더한 것이다.

이념성향은 5점 척도(“매우 진보적”, “다소 진보적”, “중도적”, “다소 보수적”, “매우 보수적”), 정치적 불만은 한국의 정치상황 전반에 대하여 불만을 갖는 정도를 5점 척도에 의하여 측정했다. 당파적 태도와 관련해서는 지지정당 유무와 지지정당이 고려되었다. 조사에서는 지지하는 특정 정당을 지적하도록 요구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3분의 2정도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지지정당을 말하였지만, 나머지 약 3분의 1은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조사에서는 이들에게 다소나마 선호하는 정당이 있는가를 다시 캐물어 소극적인 선호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정당지지 태도를 확인하였다. 이런 두 차례의 연속 질문에도 “모르겠다”나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대상자는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는 지지정당이 없음 = 0, 어느 정당이든 지지 = 1로 재부호화되었다. 지지정당의 경우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기타(기타 군소정당과 지지정당 없음)로 범주화되었는데 가변수를 구성하여 실행한 분석에서는 기타 범주가 기준으로서 제외되었다.

조직관여에 관련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때로는 여러 종류의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소속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지,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과거에는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에 대한 응답항목은 4점 척도의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즉 소속된 적이 없다 = 1,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다 = 2,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 한다 = 3,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 4이다. 여기서는 정당, 시민운동단체, 노조·사업자단체·직업조합, 종교단체, 스포츠·레저 모임 등 문화단체, 동창모임, 향우회, 친목단체 각각에 대하여 조직관여를 조사하였다. 총조직관여 수준은 단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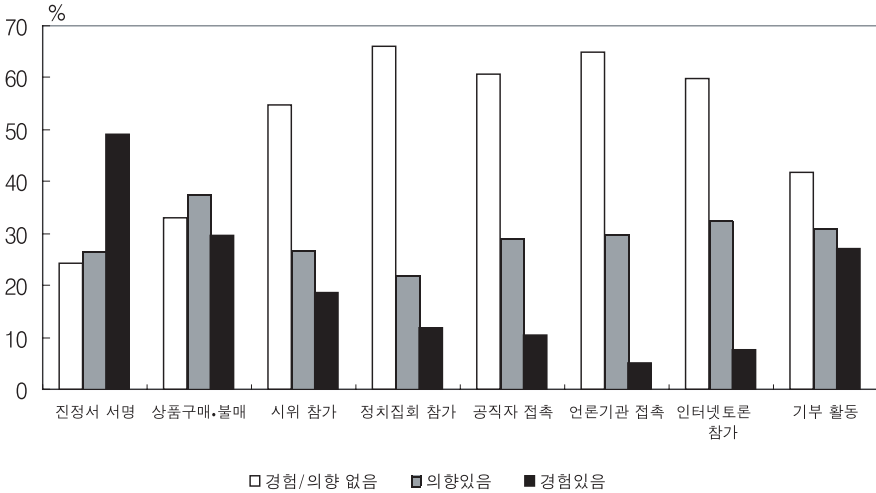
종류를 망라하여 평균을 취해 측정하였다.

IV. 시민 정치참여의 특징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 정치참여 행위의 모든 가능한 형태를 망라하여 분석하고 있지 않다. 우선, 선거를 장(場)으로 하여 전개되는 투표권유, 선거운동 지원 등 통상적 정치참여를 다루지 않는다. 17대 총선에서의 투표여부를 분석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것은 다른 행위형태와 비교를 위한 준거로서 언급될 뿐이다. 구미국가에서는 통상적인 정치참여로서의 성격이 확립되어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 그러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정치참여와 다분히 또는 완연하게 비통상적인 정치참여의 행위형태가 집중적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기의 시민참여에서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행위형태들은 고려되고 있다.

구미의 민주국가에서 정치적 기부는 통상적 정치참여로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한국 시민에게 있어서 정치적 기부나 모금활동에 가담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연말정산 시에 환급받게 하는 등의 제도화를 통해서 통상적 정치참여 메뉴의 하나로 점차 인정되고 있다. 정치집회는 과거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연설회가 중요했지만 1997년 16대 대선 이후 대규모 대중집회를 통한 유세가 불법화되어 선거시기가 아닌 경우의 정치적 집회를 가리키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다분히 비통상적 정치참여의 성격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여하튼 노무현 정부 시기에 한국의 시민은 대체로 어떤 형태의 정치참여 행위에 있어 활발한 편이거나 아니면 덜 활동적인가? 그림 2와 표 1에 의하면 참여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진정서 서명이 무려 49.1%에 달하고 그 다음으로 상품 구매·불매가 29.5%, 기부 활동이 27.1%로 높은 수준이다. 진정이나 탄원을 제기하고 특정 상품을 사주거나 불매하는 행위는 구미 국가에서도 비통상적 참여로 분류된다. 이러한 정치참여 행위의 형태가 현재 한국에서는 상당히 확산되어 있는 것이다. 기부활동도 시민 사이에서 빈번히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에는 선거비용으로 충당하게 될 자금을 기부하거나 모금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시민단체, 불우 이웃 돕기, 재난 피해자 등을 위한 비정치적 성격의 기부도 얼마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참여경험은 시위 참가(18.6%), 정치집회 참가(11.9%), 공직자



주: 사례수는 1280~1297.

그림 2. 행위형태별 정치참여자 비율

접촉(10.4%), 인터넷토론 참가(7.6%), 언론기관 접촉(5.0%)의 순으로 높다.

한국의 급속한 정보화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접근하여 공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일반 시민은 100명 가운데 8명 가량에 불과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03년 7월에 실시된 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전화조사에서도 인터넷 상의 토론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말한 응답자는 9.9%에 지나지 않았다(김형준 2004). 노무현 정부 시기에 와서 방송매체를 통한 토론이 강조되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의 비율은 100명 가운데 5명 정도이다.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과 접촉을 시도했던 시민의 비율도 낮는데, 다분히 공적이고 집단적인 이해와 명분뿐만 아니라 개인적 민원 사항과 관련한 접촉을 포함해서 응답을 얻고자 했다면 그 비율은 좀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비율도 진정서 서명, 상품 구매·불매, 기부 활동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시민 10명 중 1~2명이 참여를 경험했다는 절대적 비율 자체가 낮은 수준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대중이 참여하는 집회와 시위가 결코 드물다고 말할 수 없다.

앞으로 정치참여 행위를 할 의향까지 고려할 때에도 진정서 서명(75.1%), 상품 구매·불매(67.0%), 기부 활동(58.1%)은 역시 시민 다수가 수용하는 형태의 정치참여 행위이다. 반면, 정치집회 참가(33.9%), 언론기관 접촉(35.0%), 공직자

표 1. 행위형태별 정치참여 수준의 분포

행위 형태	정치참여 수준의 분포(%)			평균	사례수
	저(1)	중(2)	고(3)		
진정서 서명	24.3	26.6	49.1	2.25	1297
상품 구매·불매	33.0	37.5	29.5	1.97	1292
시위 참가	54.8	26.7	18.6	1.64	1293
정치집회 참가	66.1	22.0	11.9	1.46	1281
공직자 접촉	60.6	29.0	10.4	1.50	1280
언론기관 접촉	65.0	30.0	5.0	1.40	1280
인터넷토론 참가	59.9	32.5	7.6	1.48	1282
기부 활동	41.9	31.0	27.1	1.85	1280

주: 저(1) = 경험/의향 없음; 중(2) = 의향 있음; 고(3) = 경험 있음.

접촉(39.4%), 인터넷토론 참가(40.1%), 시위 참가(45.3%)는 절반 이하의 시민들만이 이미 경험했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행위형태이다. 표 1에서 제시된 정치참여 수준의 평균을 보아도, 진정서 서명(2.25), 상품 구매·불매(1.97), 기부 활동(1.85)에 있어서 시민의 정치참여가 비교적 활발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리고 언론기관 접촉(1.40), 정치집회 참가(1.46), 인터넷토론 참가(1.48), 공직자 접촉(1.50) 및 시위 참가(1.64)에 있어서 시민의 정치참여는 상대적으로 덜 활발하다.

이제 8개의 행위형태를 더 작은 수의 행위양식으로 축소하거나 이를 단일의 지수로 집약하여 정치참여 행위의 총체적 수준을 논의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표 2는 8개의 행위형태와 총선투표를 합하여 9개의 변수 간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일별하면, 총선투표는 나머지 8개 변수들과 약한 정방향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해당되는 수치가 모두 .10 이하에 머물고 있다. 총선투표를 제외한 변수들은 예외없이 정방향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수의 크기가 .3에서 .6 수준에 이른다. 한 형태의 행위 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어느 형태의 행위 수준도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특히, 진정서 서명과 상품 구매·불매, 시위 참가와 정치집회, 공직자 접촉과 언론기관 접촉, 공직자 접촉과 인터넷토론 참가는 .5 이상의 피어슨 계수(r)가 산출된다.

다른 행위형태와 친화력이 가장 약한 총선투표 변수를 배제하고, 나머지 8개 변

표 2. 정치참여 행위형태 간 상관관계

피어슨 계수

행위형태	총선 투표	진정서 서명	상품 구매·불매	시위 참가	정치집회 참가	공직자 접촉	언론기관 접촉	인터넷토론 참가
진정서 서명	.040 ^a							
상품 구매·불매	.093	.510						
시위 참가	.104	.436	.455					
정치집회 참가	.086	.326	.359	.644				
공직자 접촉	.074	.282	.282	.441	.473			
언론기관 접촉	.086	.316	.323	.427	.453	.555		
인터넷토론 참가	.059 ^b	.356	.389	.465	.475	.413	.532	
기부 활동	.084	.349	.358	.381	.388	.410	.387	.372

주: ^a.10의 수준에서조차 유일하게 유의미하지 않음; ^b $p < .05$ 에서 유의미; 나머지 모든 상관계수는 $p < .01$ 에서 유의미; 사례수 = 1232~1286.

수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행한 결과가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주성분 분석을 통해 고유값이 1 이상인 단일요인을 추출했다(고유값은 3.906). 이 단일요인에 의하여 전체분산 중 거의 절반(48.8%)이 설명된다. 8개 변수들은 이 요인과 .625로부터 .772에 이르는 요인부하값을 갖는데, 그것들 사이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단일요인을 정치적 활동성(political activism)으로 개념화하고 각 변수에 대한 가중치 없이 총체적 참여수준을 측정하는 지수(총참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단일요인의 추출만을 토대로 하여 여기서 분석되는 정치참여가 완전한 일차원성을 갖는다고 주장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전체분산 중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가 아직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인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어 사각회전(Oblimin 방식)을 통해 전체분산의 77.8%를 누적적으로 설명하는 4개의 요인에 따라 8개의 변수가 어떤 패턴의 요인행렬을 보이는가를 살펴보았다. 각 변수의 절대적 요인부하값에 따라서 8개의 변수가 어떻게 묶이는가를 보면, 공직자 접촉, 언론기관 접촉과 인터넷토론 참가는 제1요인, 진정서 서명과 상품 구매·불매는 제2요인, 시위 참가와 정치집회 참가는 제3요인, 기부 활동은 단독으로 제4요인과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4개의 정치참여 행위 양식이 도출되어 그 명칭을 각각 공직자/미디어 접촉, 서명/구매·불매, 집회/시

표 3. 정치참여 행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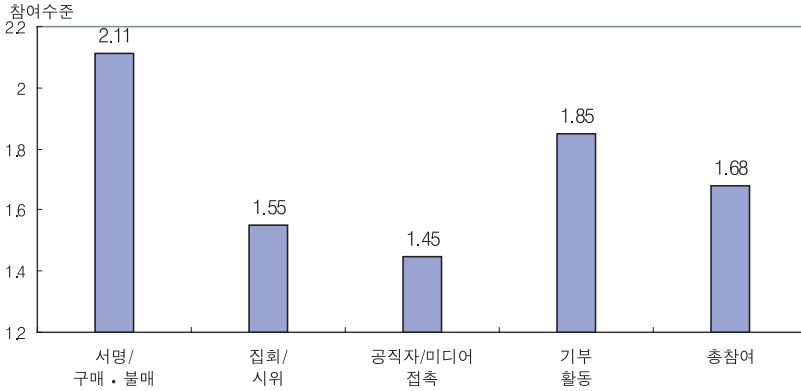
행위형태	주성분분석(회전전)		사각회전(Oblimin) 후 패턴행렬				
	요인 1	공통분산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공통분산비
진정서 서명	.625	.391	.045	.820	.006	.093	.739
상품 구매·불매	.647	.419	.039	.787	-.089	.041	.729
시위 참가	.772	.597	-.045	.160	-.861	-.023	.821
정치집회 참가	.750	.563	.041	-.092	-.920	.021	.840
공직자 접촉	.694	.482	.572	-.178	-.189	.325	.680
언론기관 접촉	.721	.520	.898	.001	.056	.057	.794
인터넷토론 참가	.723	.522	.742	.216	-.083	-.166	.702
기부 활동	.643	.413	.003	.163	-.019	.902	.921
고유값	3.906		3.906	.963	.712	.645	
분산의 백분율	48.828		48.828	12.037	8.899	8.061	
누적 백분율	48.828		48.828	60.866	69.765	77.826	

주: 절대값이 .5 이상인 요인부하값은 짙게 표시함; 사례수 = 1280.

위, 기부 활동으로 붙었다. 각 행위양식별 정치참여 수준은 해당되는 행위형태 점수의 평균으로 측정되어 1부터 3사이의 범위에 있도록 하였다.

정치참여의 다차원성을 강조한 버버와 나이는 각 행위양식이 갖는 특징을 강조한다.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볼 때에 정보전달에 중점을 두는 행위양식이 있는가 하면 압력행사에 역점을 두는 행위양식이 있다. 행위자 개인의 주도적 선택과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 행위양식간 차이가 있는가하면 정치참여 행위를 위해 행위자간의 협력이 요구되는 정도에 있어서도 행위양식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하면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반된 이해관계와 의사를 갖는 사람들과 대립과 갈등이 창출되는 정도 역시 행위양식에 따라 달라진다(Verba and Nie 1972, 47-51; Verba, Nie, and Kim 1978, 310-312).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4개 행위양식, 즉 공직자/미디어 접촉, 서명/구매·불매, 집회/시위, 기부 활동의 특징을 따져 볼 수 있다.

행위자 개인의 주도성(主導性, individual initiative)을 요구하는 하는 점에서는 공직자/미디어 접촉이 다른 어떤 행위양식보다 가장 두드러질 것이다. 행위자간의 협력과 조직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서명/구매·불매와 집회/시위를 지목하게 되



주: 사례수는 1238~1286.

그림 3. 행위양식별 정치참여 수준의 평균

며, 상세한 정보전달보다는 압력행사와 항의로써 사회 내부와 대정부 갈등을 유발하는 점에서는 집회/시위 행위양식이 단연 부각될 것이다. 따라서 행위양식간의 구분은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

그림 3은 총참여 수준의 평균과 행위양식별 참여수준의 평균을 보여준다. 한국 시민참여의 집합적인 총참여 수준(1.68)을 기준으로 서명/구매·불매와 기부 활동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수준이 비교적 높고, 반면 공직자/미디어 접촉과 집회/시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참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다시 확인된다.

V. 시민 정치참여의 결정요인

1. 단순상관관계 분석

시민의 정치참여 수준과 이를 결정하는 독립변수 간의 단순상관계수를 먼저 분석한다. 여기서는 주로 피어슨 상관계수에 의존하는데 독립변수가 명목변수 내지 가변수의 경우 크레이머 브이(Cramer's V)를 추가로 제시한다.

교육과 소득 수준은 모두 총선투표와 .10의 수준에서조차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연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두 독립변수는 통상적 정치참여의 성격이 가장 농후한 기부 활동과 약한 편이지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고 나머지 3개의 행위양식과는 이보다 강한 상관관계가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소득 수준은 총선투표를 제외한 총참여에 주목할 만하게 강한 편인 독립변수적 효과를 창출한다. 직업유형은 모든 행위양식과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총선투표와의 상관관계가 다른 4가지 행위양식과의 상관관계보다 낮다는 점에서 교육이나 소득 수준과 일치된 양태를 보여준다. 관리전문직 종사자는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보다 모든 행위양식에서 정치참여의 수준이 높다. 관리전문직 여부와 총참여 수준 간의 상관관계는 다른 어느 유형의 직업종사 여부와 총참여 수준 간의 상관관계보다 강하다. 관리전문직과 준전문사무직 종사는 통상적, 비통상적 정치참여에서 모두 참여의 수준을 높이는 요인임이 시사된다. 학생의 경우는 투표참여에서 학생이 아닌 시민보다 낮은 수준에 있으나 다른 행위양식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런데 생산기능노무직이나 주부는 대체로 정치참여 수준을 하강시키는 범주이다.

교육과 소득 수준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투표참여에 의미있는 효과를 미치지 있지 못하나, 다른 행위양식에는 대체로 강한 편인 영향력을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순전히 통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투표참여를 예외로 하고는 현재의 한국정치에서 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치참여 수준이 높다는 명제(가설 I)가 경험적으로 성립한다.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정치참여가 덜 활발하다는 것은 표 4의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그렇지만 모든 행위양식과 성별의 상관관계수는 절대적 크기가 .2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회/시위, 공직자/미디어 접촉에 있어서만 .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이다. 결국,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이 남성보다 낮다는 가설 II는 일거에 기각될 수 없지만 단지 제한된 행위양식의 정치참여에서만 타당하다. 집회/시위는 가시적으로 조직된 집단적 맥락에서 전개되는 비통상적 정치참여이다. 공직자/미디어 접촉은 행위자가 관련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직접 만나려고 시도하는 통상적 성격의 정치참여와 비교적 최근에 활성화되거나 가능해져서 아직은 통상적 정치참여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방송매체, 신문과 인터넷 활용을 포함한다. 공직자/미디어 접촉은 행위자 개인의 각별한 주도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여성은 조직적 집단행동이나 개인적 주도성이 강한 정치참여에 있어서 남성보다

표 4.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정치참여 행위양식의 상관관계 피어슨 계수(크레이머 브이)^a

독립 변수	총선 투표	서명/ 구매·불매	집회/ 시위	공직자/미디어 접촉	기부 활동	총참여 (투표제외)
교육수준	.004	.409***	.355***	.315***	.247***	.435***
가구소득수준	.039	.337***	.251***	.270***	.235***	.358***
직업유형 (가변수)	(.096)*	(.173)***	(.164)***	(.161)***	(.172)***	(.195)***
관리전문직	.075*** (.075)***	.097*** (.110)***	.184*** (.186)***	.203*** (.239)***	.150*** (.152)***	.208*** (.244)***
준전문사무직	.035 (.035)	.127*** (.128)***	.120*** (.131)***	.079*** (.116)***	.060** (.084)**	.134*** (.183)***
학생	-.050* (.050)*	.145*** (.148)***	.114*** (.139)***	.148*** (.207)***	.063** (.109)***	.157*** (.209)***
서비스판매직	-.019 (.019)	-.021 (.083)	-.065 (.078)	.029 (.076)	-.033 (.034)	-.048 (.142)
생산기능노무직	-.014 (.014)	-.069 (.082)	-.080*** (.090)**	-.104*** (.135)***	-.033 (.033)	-.096*** (.162)***
주부	-.012 (.012)	.052 (.055)	-.073*** (.091)**	-.095*** (.103)**	-.031 (.053)	-.057** (.108)
사회경제적 지위 ^b	.033	.415***	.344***	.329***	.276***	.446***
성별	-.037 (.037)	-.040 (.082)	-.184*** (.187)***	-.151*** (.167)***	-.049 (.080)**	-.183*** (.200)***
연령	.081***	-.379***	-.276***	-.275***	-.198***	-.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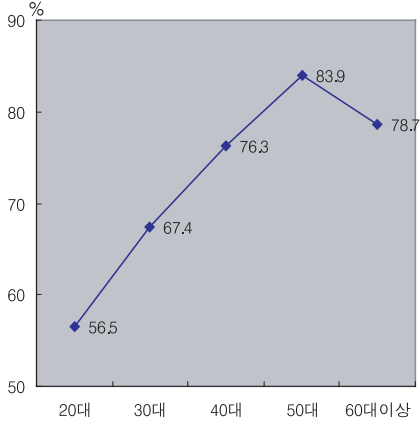
주: ^a독립변수가 명목변수, 가변수의 경우에만 제시함, ^b교육과 가구소득 수준의 복합지수; * p<.10, ** p<.05, *** p<.01; 사례수 = 1179~1286.

덜 활발하다.

연령과 정치참여의 관계는 논의를 위해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된다. 연령변수는 매우 예외적으로 투표참여에 있어서만은 나이를 먹을수록 투표할 가능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른 4개의 행위양식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수준이 낮아지는 뚜렷한 경향이 있다. 특히, 서명/구매·불매에 있어서 그런 경향이 가장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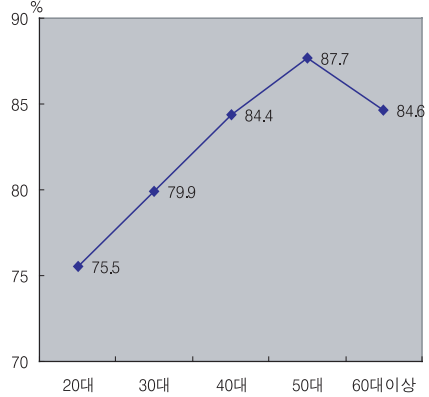
그림 4의 (1)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2년 12월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

16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중앙선거위원회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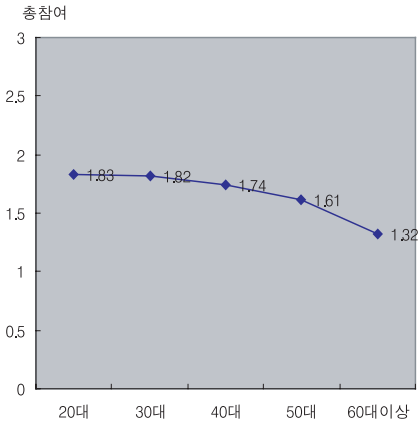
(1)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2004년 종합사회조사)



(2)

총참여(총선투표 제외) 수준



(3)

회귀모형 (각 사례수=5)

(1) 직선 : $Y=54.29+6.09X$
 (중결정계수 = .798)
 2차함수 : $Y=37.54+20.45X-2.39X^2$
 (중결정계수 = .970)

(2) 직선 : $Y=74.62+2.60X$
 (중결정계수 = .863)
 2차함수 : $Y=66.52+9.54X-1.16X^2$
 (중결정계수 = .951)

(3) 직선 : $Y=2.03-0.12X$
 (중결정계수 = .846)

그림 4. 연령별 정치참여수준

서의 연령대별 투표율을 선거인명부를 토대로 자체적인 방법에 의거 집계하여 2003년 6월에 공표한 자료를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다. 당시 공식 집계된 전국투표율은 70.8%이었다. 20대와 30대 연령층의 투표율은 전국투표율에 미치지 못했고 40대, 50대와 60대 이상은 이를 상회하였다. 20대부터 50대까지는 연령수준이 높

을수록 투표율도 상승하다가 60대 이상에서는 50대보다 투표율이 하강하였다. 이에 대한 회귀직선의 경험적 적합도는 0.8정도의 중결정계수를 갖는다. 그런데 노년에 가서 투표율이 하락하는 현상을 감안한 2차함수 형태의 회귀방정식은 중결정계수가 1에 가까워 경험적 적합도가 거의 완벽하다. 2004년 4월 17대 총선에서의 투표율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 이런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 부득이 한국종합사회조사의 결과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예상하던 바와 같이 투표했다고 하는 응답율이 80.1%가 되고 실제 공식적 전국투표율 60.6%를 훨씬 상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대별 투표율의 변화양태는 16대 대선에 관한 공식 자료의 경우와 동일하다. 투표참여를 중심으로 통상적 정치참여에 관한 가설 III-1이 입증된다.

순전히 통상적인 정치참여를 제외하고 연령이 정치참여 수준에 미치는 독립변수적 효과를 살펴보자. 기부 활동은 구미의 민주정치에서는 통상적인 정치참여 행위의 형태 내지 양식으로 이미 확립되어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최근야야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연령과 기부 활동의 상관계수는 -0.198 이다. 공직자/미디어 접촉 양식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을 만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치참여라고 할 수 있으나 언론기관 접촉과 인터넷토론 참가는 이제 서서히 통상적 정치참여의 경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연령과 이 행위양식 간 산출된 상관계수는 -0.275 이다. 그리고 집회/시위, 서명/구매·불매는 비통상적 정치참여에 속하는 점에 이견이 별로 없을 것인데, 상관계수는 각각 -0.276 과 -0.379 이다. 요컨대, 가설 III-2의 내용대로, 젊은 시민일수록 비통상적 성격이 농후하거나 완전한 정치참여의 수준이 높다.

표 5는 정치 정보/지식, 정치적 관심, 정치적 인지, 정치효능감이 각각 어떤 행위양식이든 참여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무시 못할 크기의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런 심리적 구성요소를 종합한 시민적 정향과 총참여 간의 상관계수는 $.380$ 에 이른다. 행위양식별로는 시민적 정향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적고 공직자/미디어 접촉과 집회/시위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크다. 여하튼, 시민적 정향과 정치참여 수준 간 정방향의 관계에 대한 가설 IV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보수적보다는 진보적일수록 여러 양식의 정치참여 행위에 있어서 활발한 경향이 있다. 다만 기부 활동에서 그러한 관계는 가장 약하여 통계적 의미를 확보하고

표 5. 정치심리적 태도와 정치참여 행위양식의 상관관계

피어슨 계수(크레이머 브이)^a

독립 변수	총선 투표	서명/ 구매·불매	집회/ 시위	공직자/미디어 접촉	기부 활동	총참여 (투표제외)
정치효능감	.126***	.216***	.276***	.290***	.181***	.319***
정치 정보/지식	.121***	.183***	.134***	.122***	.116***	.183***
정치적 관심	.176***	.225***	.290***	.311***	.188***	.331***
정치적 인지 ^b	.176***	.240***	.248***	.265***	.183***	.306***
시민적 정향 ^c	.187***	.273***	.322***	.339***	.220***	.380***
이념성향	-.054*	-.154***	-.161***	-.135***	-.042	-.178***
지지정당존재	.238*** (.238)***	.025 (.033)	.092*** (.106)***	.065** (.099)*	.077*** (.078)**	.083*** (.141)*
지지정당(가변수)						
열린우리당	.046 (.046)	.051* (.051)	.063** (.096)**	.014 (.095)*	.057** (.059)	.056* (.107)
한나라당	.086*** (.086)***	-.163*** (.170)***	-.154*** (.161)***	-.107*** (.129)***	-.074*** (.083)**	-.167*** (.186)***
민주노동당	.056* (.056)*	.185*** (.192)***	.202*** (.214)***	.164*** (.173)***	.105*** (.118)***	.219*** (.243)***
정치적 불만	-.067**	.173***	.112***	.088***	.047	.140***

주: ^a독립변수가 명목변수, 가변수의 경우에만 제시함; ^b정치 정보/지식과 정치적 관심의 복합지수; ^c정치효능감과 정치적 인지의 복합지수; * p < .10 ** p < .05, *** p < .01; 사례수 = 1174~1284.

있지 못하다. 집회/시위, 서명/구매·불매를 비롯한 비통상적 정치참여에서 진보적 이념성향이 참여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돋보인다. 가설 V도 역시 의심의 여지없이 확인되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시민은 어떤 정당이든 지지하지 않는 시민보다 모든 행위양식에서 참여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이 경향은 투표참여에서 상당히 명료하지만 다른 행위양식에서는 약하다. 즉 가설 VI-1은 타당하지만 투표참여 행위에 있어서 특히 그러하다는 점을 부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가운데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가하는 것은 약하기는 하지만 투표참여의 심리적 요인이 된다. 이 경우 한나라당 지지가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그런데 나머지 행위양식에 있어서 한나라당 지지는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참여의 억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나라당 지지와 총참여 간의 상관계수는 $-.167$ 로 $.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태도는 한나라당의 경우와 정반대로 정치참여의 촉진요인이 된다. 민주노동당 지지와 총참여 간의 상관계수는 $.219$ 이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도 민주노동당 지지와 마찬가지로 정치참여의 촉진요인이 되는데 그 효과는 약하다. 열린우리당 지지와 총참여 간의 상관관계는 $.056$ 이고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나라당 지지태도가 정치참여를 억제하는 반면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지지태도가 각각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현상은 집회/시위, 서명/구매·불매라는 비통상적 정치참여에서 비교적 명확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설 VI-2의 내용인데 경험적으로 증명된다.

분석결과, 정치적 불만이 강할수록 투표를 하지 않는 경향이 드러났다. 뚜렷하지는 않아도 그런 경향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다. 정치일반에 불만이 있을수록 투표장에 나가 어느 정당 또는 후보를 심판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투표로써 정치적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투표참여가 정치적 불만의 표현으로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 그리고 투표기권은 정치적 불만을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투표참여를 제한한다면, 정치적 불만이 강할수록 다른 행위양식으로써 정치에 참여한다. 가설 VII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정치적 불만의 정도가 강한 시민일수록 특히 진정서 서명, 불매 운동 등 비통상적 정치참여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가능성이 확인되는 것이다.

표 6을 보면, 단체 또는 조직의 종류를 막론하고 그것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은 소수의 경우만을 예외로 하고 어떤 행위양식에서나 정치참여에 더 적극적인 점이 밝혀진다. 조직관여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독립변수적 효과가 부각되어 가설 VIII이 긍정된다.

그런데 조직관여와 총참여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볼 때에 흥미로운 점은 정치참여 수준에 주는 영향력에 있어서 종교단체와 향우회를 제외하고 다른 종류의 조직이 정당보다 크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한국 정당의 취약한 조직기반 등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정당정치의 현실을 반영한다. 스포츠와 레저 모임을 포함한 문화단체에 관여하는 것이 투표참여를 제외한 정치참여 수준과 상대적으로 가장 강한 관계를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 동창 모임, 친목단체, 노조나 사업자 단체 등 직업조합, 시민운동단체에 관여하는 것이 모두 정당관여보다 더 참여수준을 촉진한다. 종교

표 6. 조직관여와 정치참여 행위양식의 상관관계

피어슨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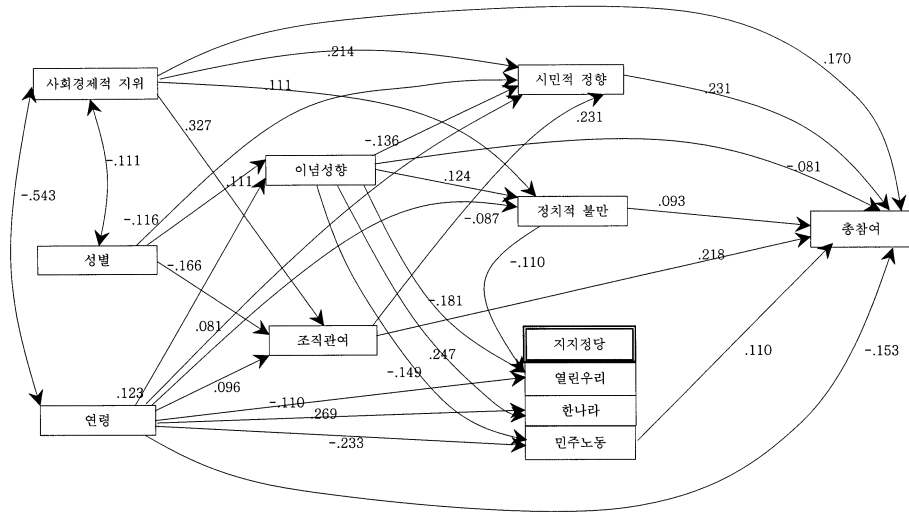
독립 변수	총선 투표	서명/ 구매·불매	집회/ 시위	공직자/미디어 접촉	기부 활동	총참여 (투표제외)
정당	.075***	.069**	.151***	.153***	.099***	.143***
시민운동단체	.055*	.114***	.224***	.192***	.166***	.210***
노조, 사업자단체	.039	.135***	.248***	.163***	.128***	.222***
종교단체	.038	.069**	.026	.011	.092***	.054
스포츠, 문화단체	.066**	.243***	.247***	.279***	.229***	.317***
동창모임	.063**	.188***	.220***	.225***	.196***	.263***
향우회	.116***	.031	.106***	.084***	.050	.084***
친목단체	.096***	.173***	.199***	.200***	.212***	.245***
총조직관여 ^a	.133***	.262***	.326***	.311***	.287***	.373***

주: ^a단체유형을 망라한 평균; * $p < .10$ ** $p < .05$, *** $p < .01$; 사례수는 1206~1281.

단체의 경우도 기부 활동, 서명/구매·불매에 있어서 참여수준을 촉진하는 효과가 적어도 .05의 수준에서는 유의미하다. 놀랍게도, 향우회는 다른 행위양식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투표참여와 관련해서 어떤 다른 종류의 단체나 조직에 비하여 정치참여의 촉진세력이 된다. 선거에서 향우회를 통한 지지 유도와 동원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시민운동단체나 노조와 같은 직업조합은 정부나 정책결정자를 상대로 정치적 활동을 전개할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문화단체, 동창모임, 친목단체가 시민운동단체나 노조보다 서명/구매·불매, 집회/시위, 공직자/미디어 접촉, 기부 활동에 있어서 소속 구성원의 참여수준을 제고하는 영향력이 더 크다. 이들 조직이나 단체는 당초에 비정치적 목적이나 명분을 내세워 만들어지고 활동하면서 시민을 조직생활로 견인하는데 실제로 정당보다 더 효과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2. 경로 분석

이제 당초의 분석모형을 자료에 적용, 분석한 결과 그림 5에서와 같이 추정된 경로계수의 방향과 크기에 주목하여 시민 정치참여 수준에 대한 논의를 좀더 진행 시키고자 한다. 그림 5는 .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준화 경로계수만



주: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표준화 계수만 표시함; 조정된 중결정계수 = .335, 사례수 = 1032.

그림 5. 시민 정치참여의 경로분석 결과

을 제시한다. 여기서의 최종 종속변수는 투표참여를 제외한 4가지 행위양식을 종합한 총참여이다. 총참여는 이 시점에서 한국 시민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가능한 형태의 정치참여 행위를 망라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노무현 정부 시기에 중요성을 갖는 통상적, 비통상적 정치참여의 행위형태를 포괄하고 있다. 그림 5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수간의 상관계수, 즉 여성이나 높은 연령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갖는 역방향 관계에 관한 수치는 단순상관계수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변수 회귀분석을 통해 산출된 경로계수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치참여 행위의 수준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크기는 .170으로 아주 작지 않고 실질적이다. 정치참여에 요구되는 자원과 능력의 보유 그 자체가 참여행위를 유도하고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정치참여를 유발하는 심리적 동기를 창출하여 참여수준을 높이기도 한다. 사회경제적 지위 모형은 시민적 경향의 매개를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간접효과도 상정(想定)하고 있는데 그것의 크기는 .049(.214 × .231)이다. 이 밖에도 사회경제적 지위의 간접효과는 정치적 불만(.111 × .093)이나 조직참여(.327 × .218 + .327 × .231 × .231)

를 경유하여서도 발생한다. 이러한 모든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를 합하면 사회경제적 지위의 총효과는 .318에 이른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정치참여 수준을 상승시키는 비교적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성별 변수의 직접효과는 없으나 간접효과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작용한다. 여성일수록 시민정향이 낮고($-.116 \times .231$), 이념성향이 보수적이며($.111 \times -.081$), 보수적일뿐 아니라 동시에 시민정향이 낮고($.111 \times -.136 \times .231$),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지지 가능성이 적으며($.111 \times -.149 \times .110$), 조직에 덜 관여하는 까닭에($(-.166 \times .218) + (-.166 \times .231 \times .231)$) 정치참여 수준이 낮게 된다. 여성일수록 보수적 이념성향을 갖게 되고 현 정치상황에 불만이 있어 정치참여가 활발해지는 경로($.111 \times .124 \times .093$)도 있으나 이것의 상쇄 효과는 상당히 약하다. 결국, 성별 변수가 정치참여 수준에 미치는 총효과는 $-.083$ 으로 약한 편이지만 여성에게는 분명하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연령 변수가 이 연구에 포함된 중요 참여행위의 총체적 수준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153$ 로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수준이 낮게 되는 생애주기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순전히 통상적인 성격을 갖는 투표참여가 제외되고 다분히 비통상적인 정치참여가 논의되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 이념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123 \times -.081) + (.123 \times -.136 \times .231) + (.123 \times -.149 \times .110) + (.123 \times .124 \times .093)$), 또한 정치적 불만의 정도($-.087 \times .093$)나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가능성($-.233 \times .110$)이 약하여 정치참여 수준이 낮아진다. 이 점은 세대 효과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연령이 많으면 시민정향의 수준이 높고($.081 \times .231$), 조직관여 수준도 높아($.096 \times .218 + .096 \times .231 \times .231$) 약간의 상쇄 효과는 발생한다. 그러나 총참여에 부(負)의 방향으로 미치는 효과($-.203$)에 비해 정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효과($.046$)는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총효과는 $-.157$ 이 된다.

그림 5에서 보면, 시민의 이념성향은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연령과 성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현재 한국정치에서 이념균열이 존재한다면 계급이나 계층 구조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성차와 세대가 형성하는 문화적 차이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념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그 자체가 참여수준을 낮추며($-.081$), 아울러 보수적일수록 시민적 정향이 낮고($-.136 \times .231$),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낮아져($-.149 \times .110$) 참여수준이 낮아진다. 현 정부 시기에 보수적일수록

정치전반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어 정치참여로 나가는 경향(.124 × .093)이 없지 않으나 이 경로의 효과는 미미하다. 이념성향이 총참여 수준에 미치는 총효과는 -.117가 된다.

나머지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자. 시민적 정향의 직접효과는 그 크기가 .231이고 정치적 불만은 그 직접효과와 크기가 .093이다. 민주노동당 지지태도가 총참여 수준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110가 된다. 조직관여의 총효과는 직접효과(.218)와 시민적 정향을 거치는 간접효과(.231 × .231)를 합쳐 .271로 계산된다. 시민이 각종 조직과 단체에 소속하여 활동에 가담할수록 정치참여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상당히 강한 편이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운데는 사회경제적 지위(.318)의 독립변수적 효과가 가장 크다. 그 다음으로는 연령(-.157), 성별(-.083) 순이다. 정치심리적 태도에 있어서는 시민적 정향(.231)의 효과가 가장 크고, 이념성향(-.117), 민주노동당 지지(.110), 정치적 불만(.093)의 순이다. 조직관여 변수의 효과(.271)는 모든 독립변수를 통틀어 사회경제적 지위 다음으로 큰 효과를 보여준다.

정치참여의 수준과 관련하여 기준선이 되는 버바와 나이의 사회경제적 지위 모형은 매개변수로서 시민적 정향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창출하는 총효과의 크기는 .219(.170 + .049)로 축소된다. 앞에서 조직관여 변수의 총효과는 .271로 측정되었다. 조직관여 모형이 사회경제적 지위 모형보다 설명력이 다소 더 높다. 그런데, 두 모형의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그림 5에서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조직관여의 수준을 높이는 경향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경로계수 = .327). 이것은 조직관여 모형의 효과가 사회경제적 지위 모형의 효과를 억제 내지 축소하지 않고 보강하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말해준다. 즉 정치참여를 위한 자원과 능력, 심리적 동기가 이미 갖추어진 시민일수록 활발한 조직관여를 하기 때문에 참여촉진 요인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시민이 그렇지 않은 시민에 비하여 정부와 정책결정자에 대한 발언권이 더욱 강해지며 정치적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경로 분석의 최종 단계에서 행위양식별로 회귀방정식을 도출한 결과가 표 7에 요약되어 있다. 유의미한 독립변수와 그 효과의 방향 및 크기, 경험적 적합성에 있어서 집회/시위는 그림 5의 경우와 아주 유사하다. 총참여 지수의 구성에 있어서 집회/시위 행위양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서명/구매·불매를 중속

표 7. 최종 회귀분석 결과

행위양식	p < .01 유의미 독립변수 (표준화 계수)	조정된 중결정계수	사례수
총선투표	시민적 정향(.139), 조직관여(.092), 연령(.132) 열린우리당(.259), 한나라당(.238) 민주노동당(.242)	.084	1039
서명/구매·불매	사회경제적 지위(.181), 시민적 정향(.163) 이념성향(-.089), 정치적 불만(.123) 성별(.062), 조직관여(.122), 연령(-.169)	.234	1060
집회/시위	사회경제적 지위(.122), 시민적 정향(.200) 이념성향(-.065), 정치적 불만(.072) 성별(-.087), 조직관여(.192), 민주노동당(.140) 연령(-.104)	.248	1057
공직자/미디어 접촉	사회경제적 지위(.078), 시민적 정향(.217) 이념성향(-.064), 성별(-.081), 조직관여(.191) 연령(-.149)	.217	1051
기부 활동	사회경제적 지위(.146), 시민적 정향(.110) 조직관여(.210), 열린우리당(.090) 민주노동당(.090)	.125	1051

주: 총참여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계수의 부호가 다른 경우는 밑줄을 그었음.

변수로 대입했을 때에는 민주노동당지지 변수가 통계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데, 성별 변수는 경로계수의 부호가 바뀐다. 이 행위양식에 관한 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활발하게 정치참여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미디어 접촉의 경우에는 총참여와 비교하여 정치적 불만과 민주노동당 지지가 통계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기부 활동의 경우는 총참여와 비교하여 이념성향, 정치적 불만, 성별, 연령이 통계적 의미가 없으며 대신에 열린우리당 지지가 정방향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 모금은 어느 정당보다도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유리한 처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총참여를 구성한 행위양식을 망라하여 영향력을 갖는 독립변수는 사회경제적 지위, 시민적 정향, 조직관여가 된다. 이 세 변수는 다른 국가 시민의 정치참여 수준을 설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인데, 현대 한국 시민의 정치참여 수준의 경우에도 역시 그렇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에 의하면 투표참여의 수준은 이 연구에서 논의된 다른 형태 또는 양식의 참여행위 수준과 상당히 다르게 설명이 된다. 우선, 회귀분석의 경험적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시민적 정향, 조직관여는 중요한 설명변수로 남아 있지만 사회경제적 지위는 통계적 의미가 없다. 연령의 경우는 오히려 나이가 많은 시민일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특이한 점은 정당지지에 관련된 세 변수가 모두 참여수준을 높인다는 것이다. 투표참여는 명시적으로 어느 정당 또는 후보를 선택하여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당파적 행위이기 때문에 당파적 태도가 이 대목에서 두드러진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VI. 결 론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를 주창하면서 ‘국민이 대통령’,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등 시민 정치참여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왔다. 방송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토론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가두집회 참가와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다른 어느 집권세력보다도 수용적인 자세를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일반 시민이 자신의 견해와 이익을 정부와 정책결정자를 상대로 표명하는 정치참여는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데 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이다. 이렇게 볼 때에 현 정부는 시민참여를 중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한국정치의 토양에 착근시키려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민 정치참여의 무대가 과거보다 넓혀졌다고 해서 실제로 반드시 국민 각계각층이 고루 정치적 발언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여의 장이 종전보다 많이 열려진다고 해도 참여를 위한 자원, 능력과 동기를 이미 갖추고 있는 시민들의 독무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정치참여 활성화는 민주주의라는 명분 아래 결과적으로는 당파적이거나 다른 정치적 편향성을 갖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없지 않다.

이 연구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1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자료를 토대로 다음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즉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정치참여 행위에 있어서 더욱 또는 덜 활발하며, 정치참여 행위수준에 있어서 시민 개인별 차이는 어떻게 설명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정치참여는 시민이 공직자를 선출하거나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공직자와 정책결정기관을 상대로 전개하는 활동이다. 종래의 연구는 시민이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선거운동에 가담하는 선거적 참여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는 17대 총선에서의 투표참여 여부를 다른 행위형태와 비교하기 위한 준거로 삼고 노무현 정부 시기의 시민 정치참여에 보다 더 부합하는 행위형태에 초점을 맞춘다. 그것은 진정서 서명, 특정 상품을 구매 또는 불매하는 캠페인 가담, 시위 참가, 정치적 집회 참가, 의견표명을 위한 공직자 접촉, 정치적 기부와 모금 활동, 의견개진을 위한 언론기관 접촉, 인터넷토론 참가의 8가지이다. 이 가운데 공직자 접촉, 기부 활동은 민주정치에서 시민에게 익숙한 통상적 참여에 속한다. 그 나머지 행위형태의 경우 인터넷토론은 비교적 최근에 확산되고 있으며 집회와 시위 참가나 진정서 서명과 같은 행위는 상당히 또는 분명하게 정치적 항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비통상적 정치참여로 불린다. 시위 참가와 같이 전형적으로 비통상적인 참여는 합법성의 경계를 벗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시위에 참가하는 시민은 자신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정치참여의 경험여부라는 잣대를 적용하면 한국의 시민 매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이 진정서 서명, 상품 구매·불매, 기부 활동을 벌였다. 특히 10명 중 5명 가량이 진정 내지 탄원에 동참한 경험이 있다. 이미 경험한 여부뿐만 아니라 차후 행할 의향을 따져 볼 때 시민 전체의 절반 이상은 진정서 서명, 상품 구매·불매, 기부 활동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반면 시위 참가, 정치집회 참가, 공직자 접촉, 인터넷토론 참가, 언론기관 접촉을 경험한 시민의 비율은 매 10명 중 2명에 미달하고 장차 의향을 고려해도 수용적 태도를 갖는 시민은 절반에 훨씬 못 미친다. 이 시대에 바야흐로 정보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나 인터넷 토론에 참가하거나 의견표명을 위해 언론기관을 접촉해 본 시민은 매 10명 중 1명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을 정도이다.

요인분석 기법을 통해서 8개의 행위형태를 총참여라는 단일 변수로 집약하고, 아울러 서명/구매·불매, 기부 활동, 집회/시위, 공직자/미디어 접촉의 4개 행위양식으로 묶을 수 있었다. 한국 시민은 앞의 2개 행위양식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고 나머지 2개 행위양식에서는 덜 활발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더 나아가서 정치참여 행위수준의 개인별 차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명제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첫째, 교육과 가구소득 수준으로 구성된 사회경제적 지위는 투표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으나 이를 제외한 모든 행위 형태 또는 양식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시민일수록 정치참여가 활발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정치참여를 위한 능력과 자원을 의미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는 참여수준에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변수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큰 총효과를 창출한 독립변수이다. 구미의 민주국가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가의 맥락에서 검증된 정치참여에 관한 사회경제적 지위 모형이 한국의 경우에도 타당한 것으로 수증된다.

둘째, 정치참여 수준에 있어서 성차는 크지 않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더 활발하다. 조직화된 집단적 맥락에서 전개되는 집회와 시위, 개인적 주도성을 각별히 요구하는 공직자 접촉과 언론 매체 및 인터넷 활용을 통한 정치참여에서 양성의 차가 명료하다.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시민적 정향, 보다 강한 보수적 이념성향, 민주노동당에 대한 상대적으로 약한 지지, 저조한 조직관여 수준 등을 고려하면 여성이라는 특성 자체가 정치참여 수준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셋째, 투표참여를 제외하고 젊은 시민일수록 정치참여에 더 활발하다. 이런 경향은 시위와 집회 참가와 같은 비통상적 정치참여는 물론 기부 활동, 공직자와 미디어 접촉을 포함한 통상적 정치참여에서도 그러하다. 이것은 젊을수록 혈기가 왕성하고 신체적 기민성을 갖고 있어 그러하다는 생애주기 효과의 관점에 의한 설명만으로써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 시기는 과거에 비해 20대와 30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고 평가된다. 이들 연령층의 진보적 이념성향과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불만 등 변화지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젊은 시민들은 권위주의 체제가 자유화되는 시점에서부터 민주적 이행 이후의 시기에 형성기를 보냈다. 이들 젊은 세대는 권위주의 정치를 체험한 40대 이후의 연령층보다 민주적 가치와 실천에 훨씬 더 익숙하다. 세대 효과의 관점에서 연령이 정치참여 수준에 주는 영향을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넷째, 정치적 인지와 정치효능감을 포함하는 시민적 정향이 정치참여 수준을 향상시키는 요인이다. 이 또한 세계의 여러 국가 연구에서 널리 입증된 일반명제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시민적 정향은 정치심리적 변수군에서 가장 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현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시민의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정치참여가

활발한데, 특히 집회와 시위 참가와 같은 비통상적 정치참여에서 더욱 그러하다.

여섯째, 지지하는 정당의 유무는 예상하던 바대로 투표참여에 있어서 가장 분명한 차이를 낳고, 다른 행위 형태 또는 양식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리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태도는 비통상적 참여행위의 수준에서 차이를 가져온다. 즉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3당에 대한 지지태도를 각각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나라당 지지는 정치참여의 수준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지지가 가장 두드러지게 정치참여를 촉진하며, 열린우리당 지지는 정도가 약하지만 역시 그러한 촉진요인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집회와 시위 참가, 진정서 서명과 구매 및 불매 운동 가담에서 뚜렷하다.

일곱째, 정치적 불만은 투표참여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다른 행위 형태 또는 양식에 있어서 특히 진정서 서명, 불매 운동을 비롯한 비통상적 참여의 경우에 적극적 촉진요인이다.

여덟째, 그 목적이 정치적이든 비정치적이든 각종 단체 및 조직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통상적, 비통상적 정치참여에서 활발한 분명한 경향이 있다. 스포츠와 레저 동호회를 비롯한 문화단체, 동창 모임, 친목단체, 직업조합, 시민운동단체에 관여하는 것이 정당에 관여하는 것보다 더 정치참여와 관련이 있다. 당초에 비정치적인 목적을 표방한 조직이 정당보다 더 효과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시민 속에 뿌리내리지 못한 한국정당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조직관여는 그 자체가 정치참여를 위한 자원과 능력이고, 또한 이를 통해 정치참여로 연결되는 시민적 정향 등 능력감 및 다른 심리적 동기를 강화한다. 외국의 연구에서 개발된 조직관여 모형의 일반적 타당성이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시민일수록 조직관여의 수준도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경향 때문에 한국의 경우 조직관여가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를 부가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정치참여에 적합한 자원이나 능력 및 기회 등 여건이 이미 구비된 시민이 각종 조직활동에도 적극적이어서 정치참여에서 더욱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 이렇게 사회경제적 지위와 조직관여가 동일하게 정의 방향으로 정치참여 수준에 영향을 주게 되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치참여 수준의 차이는 증폭된다.

노무현 정부 이전 시기의 정치참여 양상에 관하여 동일한 자료가 없어 체계적인 시계열적 비교가 용이하지 않아 한국정치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치참여 수준의 격차가 축소되었는지 아니면 확대되었는지를 확실히 판단할 수가 없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기에 열려진 정치참여의 장이 교육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시민들에게 과거보다 더 많은 정치적 발언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없다. 현재 능동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의사를 주장하는 ‘목소리 큰’ 시민이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위에 있거나 보통의 서민이기보다는 교육과 물질적 여건으로 보아 여유가 있는 편인 시민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이전이나 다름없이 현 정부에서도 유리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시민이 정치참여의 무대를 누비고 있다. 정치참여의 규범적 의미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합리화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한 정치참여인가 하는 볼멘소리는 여전히 사라지기 어렵다.

현 노무현 정부 시기의 정치참여에서는 젊은 세대, 진보적 이념성향을 갖고 있는 시민들, 각종 조직과 단체 활동이 활발한 시민들이 유리하다. 현 참여정부가 함께 하는 국민이 모두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다. 언제나 그러한 것일지도 모르겠으나 한국의 이 시점에서 전개되는 시민 정치참여는 당파성 혹은 정치적 편향성을 초월하고 있지 않다.

참고문헌

- 김형준. 2004. “노무현 정부에서 참여정치의 신장과 한계.” 『의정연구』 10권 1호, 57-91.
- 박동서·김광웅. 1987. 『한국인의 민주정치 의식: 대중과 엘리트』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찬욱. 1995. “한국인의 정치의식과 가치정향: 1995년 세연 국민의식조사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권 2호, 81-115.
- _____. 2000. “정치과정.” 『한국정치연구』 10호, 39-130.
- 신도철·김광웅·최명·박찬욱. 1990. 『한국민주주의의 미래: 의식과 이념적 성향 분석』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승중. 1993.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삼영.
- 어수영·곽진영. 2001. “한국인의 정치 참여의 변화와 지속성: 남성과 여성의 참여 변

- 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집 4호, 165-188.
- 안부근. 2003. “16대 대선의 지지도 변화와 투표 결과.” 김세균(편), 『16대 대선의 선거과정과 의의』, 81-101. 서울대학교출판부.
- 송호근. 2003.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세대, 그 갈등과 조화의 미학』,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조중빈. 2003. “16대 대통령 선거와 세대.”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 Barnes, Samuel H., Max Kaase, and others. 1979. *Political Action: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Democracies*, 409-447. Beverly Hills: Sage.
- Bennett, Stephen Earl, and Linda L.M. Bennett. 1986. “Political Participation.” in Samuel Long, ed.,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1, 157-204. Norwood: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Brady, Henry E., Sidney Verba, and Kay Lay Lehman Schlozman. 1995. “Beyond SES: A Resource Mod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 2, 271-294.
- Campbell, Angus, Gerald Gurin, and Warren E. Miller. 1954. *The Voter Decides*. Evanston: Row, Peterson.
- Farah, Barbara G., Samuel H. Barnes, and Felix Heunks. 1979. “Political Dissatisfaction.” in Samuel H. Barnes, Max Kaase, and others. *Political Action: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Democracies*, 409-447. Beverly Hills: Sage.
- Huckfeldt, Robert. 1979.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Neighborhood Social Contex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3: 3, 570-592.
- _____, and John Sprague. 1992. “Political Parties and Electoral Mobilization: Political Structure, Social Structure, and the Party Canva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 1, 70-86.
- Huntington, Samuel P. and Joan M. Nelson. 1976. *No Easy Choice: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1979. “Political Action: The Impact of Values, Cognitive Level, and Social Background.” in Samuel H. Barnes, Max Kaase, and others. *Political Action: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Democracies*, 305-342. Beverly Hills: Sage.
- _____.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m, Chong Lim, Young Whan Kihl, and Seong-Tong Pai. 1980. “The Modes of Citizen Political Participation: An Analysis of Nationwide Survey Results.” in C.L. Kim (ed.),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Democracy, Mobilization and Stability*, 35-55. Santa Barbara, Ca.:

- Clio Books.
- Johnson, M.W. Phillips Shively, and R.M. Stein. 2002. "Contextual Data and the Study of Elections and Voting Behavior: Connecting Individuals to Environment." in Mark N. Franklin and Christopher Wlezien, eds., *The Future of Election Studies*, 63-76. Amsterdam: Pergamon.
- Kaase, Max, and Alan Marsh. 1979. "Political Action A Theoretical Perspective." in Samuel H. Barnes, Max Kaase, and others, *Political Action: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Democracies*, 27-56. Beverly Hills: Sage.
- Marsh, Alan. 1990. *Political Action in Europe and the USA*. London: Macmillan.
- _____, and Max Kaase. "Background of Political Action." in Samuel H. Barnes, Max Kaase, and others, *Political Action: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Democracies*, 97-136. Beverly Hills: Sage.
- Milbrath, Lester W. Milbrath. 1965. *Political Participation*. Chicago: Rand McNally.
- _____, and M. L. Goe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2nd ed., Chicago: Rand McNally.
- Muller, Edward N. 1979. *Aggressive Political Particip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arry, Geraint, G. Moyser, and Neil Day. 1992. *Political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Brita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teman, Carole. 1970.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Schlozman, Kay Lehman. 2002. "Citizen Participation in America: What Do We Know? Why Do We Care?" in Ira Katznelson, and Helen V. Milner, eds., *Political Science: State of the Discipline*, 433-461. Washington, D.C.: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 Verba, Sidney, and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 _____, Norman H. Nie, and Jae-on Kim. 1978.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quality: A Seven-Nation Comparis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atterns and Determinan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Korean Citizens: An Analysis of the 2004 General Social Survey Data

Chan Wook Park | Seoul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the survey data collected in 2004, this paper describes major characteristics of Korean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accounts for varying levels of participatory behavior among them. Roughly five out of every ten people have experience of partaking in a signature drive for filing a petition with the authorities. About two out of ten have joined to crusade for buying or boycotting a commodity. The same ratio of people have participated in a donation or fund-raising campaign for any socio-political purpose. When people were asked about not only their actual participatory experience but also their prospective intention to involve in political acts,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were receptive, showing their participatory potential in each of these acts: petitioning, boycotting, and fund-raising. On the other hand, less than two out of ten have taken part in the act of political rally, demonstration, contacting public officials, debating on the internet, or contacting the mass media. Even when their intention for future political action is considered together with their actual experience, far less than half have shown participatory behavioral proneness in these acts of rallying, demonstrating, contacting officials, internet debating, and contacting media. Among the political acts taken into account in this study, internet debating and contacting media are those acts in which the lowest proportion of people engage. This is a remarkable observation given the salient and even further increasing role of the mass media and internet for political discourse during the current Roh Moo-hyun presidency. Those citizens who are higher on the socio-economic status as measured by their educational and income level tend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The younger, the higher is the participation level: this is particularly so in rallying, demonstrating, internet debating as well as contacting media. Citizens with greater level of civic orientations, including political interest, knowledge, information, and efficacy, do politically participate more. Ideologically progressive citizens are more active than are their ideologically conservative colleagues, especially in the acts of rallying and demonstrating. Support for the Democratic Labor Party or the Open Uri Party is a facilitating factor, while support for the Grand National Party is an inhibiting factor for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acts considered. Organizational affiliation is a major variable for explaining a citizen's participation level. Interestingly, the individual's involvement in a friendship society, cultural organization, or civic group is more important than that in a political party for promoting his or her political participation. Since one on higher socio-economic status is more frequently affiliated with any group or organization, one's socio-economic status interacts with his or her position in the organizational context to raise the participation level. Notwithstanding the current buzz words for participatory politics, the arena for mass political engagement has not been flung open for every ordinary citizen. Despite all the populist rhetorics, those citizens with greater resources, capabilities, and motivations already at hand have still more advantage in political participation. Outcry for leveling the political field is just round the corner.